

## <부록> 북한 핵문제·6자 회담에 대한 남한·북한·미국의 입장

### 자료 1. 6者會談 實務그룹 會議 結果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 작성 (2004년 5월 11일)

([http://www.mofat.go.kr/ko/division/am\\_2\\_view.mof?seq\\_no=771&b\\_code](http://www.mofat.go.kr/ko/division/am_2_view.mof?seq_no=771&b_code))

#### 1. 會議 概要

가. 회의 기간 및 장소 : 2004.5.12(수)-14(금), 釣魚臺 芳菲苑

나. 주요 일정

- 5.11(화) 참가국간 사전 양자, 3자협의
- 5.12(수)~5.14(금), 전체회의
- 5.15(토) 각국 대표단의 중국 외교부 다이빙궈 부부장 예방

다. 회의 진행 경과

- 의제, 발언순서, 기초발언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토론
  - 첫째날(5.12) 주요 사안별 각측 입장 표명
  - 둘째날(5.13) 소규모 회의를 통해 구체 논의
  - 셋째날(5.14) 향후 회의 일정 등 절차 문제 토의
-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거론되었으나, 각국은 기본 입장을 지키며 상대를 탐색하려는 태도

#### 2. 會議 結果 評價

가. 전반적 평가

- 핵심 쟁점들에 대한 각측의 입장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기반 형성
  -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을 통해 투명하게 달성해 나가며, 핵폐기의 첫단계 조치로서

- '동결 대 상응조치'를 논의해 나간다는 데 북한을 포함한 참가국간 공감대 형성
- 북측이 동결의 주요 요소로 '대상.검증.기간.시점'을 거론하여 향후 논의의 출발점 제공
-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평화적 핵이용, 안전보장 문제 등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참가국간 입장차이 재확인
-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이나 논의의 획기적 진전에는 미도달

## 나. 각국 주요 입장

### □ 핵폐기 원칙

- 미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원칙 강조
  - 한.일측은 핵폐기 원칙 지지
- 북측은 CVID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핵무기 계획을 투명하게 포기한다는 입장
- 중.러는 CVID 표현에 직접적인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으나, 평화적 핵이용 문제 등에 있어서는 미측과 다소 다른 입장 견지

### □ 핵동결 대 상응조치

- 북측은 핵동결은 핵폐기 과정의 첫단계로서 검증 가능하게 합의된 조건에 맞게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핵동결의 주요 요소로서 대상, 검증, 기간, 시점이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CVID가 전제된 상황에서 동결에 대한 구체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
- 우리측은 기존의 '동결 대 상응조치' 방안을 견지하면서 에너지 지원에 관한 구상을 설명
- 미.일측은 북한의 핵동결시 한.중.러의 에너지 지원 지지 언급
- 중국측은 대북 에너지 지원에 6자회담 참가국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 촉구

## □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 미측은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북측의 해명 촉구
- 북측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부인
- ※ 북측은 남북 양자협의를 시 우리측의 농축우라늄 문제 제기에 대해 "그 중요성을 알고 있다", "경청했다"라고만 언급

## 다. 우리 대표단 대응기조

- 원칙.내용에 있어서는 한.미.일간 공조를 유지하고, 설명에 있어서는 균형 있는 태도 유지 노력
  - 남.북 양자협의를 통해 농축우라늄 문제 등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유도하고, 북측 주장의 배경과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 쟁점사안에 관한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소인수회의 등 토의 구체화를 위한 회의 운영 관련 방안 제기

## 3. 向後 推進計劃

- 6월말 이전 3차 본회담 및 2차 W/G 회의 개최 추진
  -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국인 중국측에 구체 일자 제시
- 한.미.일 공조 및 중.러와의 협력관계 유지
  - 미측과의 W/G 회의 결과 평가 및 차기 6자회담 대책 등 협의
  - 장관 방러(5.23-25) 계기 러측과 6자회담 등 북핵 관련 사항 협의
  - 고이즈미 총리 방북 이후의 일.북 관계 및 6자회담에 대한 영향 분석.대응
- 쟁점사항들에 관한 우리입장 구체화
  - 우리의 '동결 대 상응조치' 구상 등 구체화

## 자료 2. 第2次 6者會談 結果

외교통상부작성 (2004.3.2)

([http://www.mofat.go.kr/ko/division/am\\_2\\_view.mof?seq\\_no=666&b\\_code=latest\\_3&div\\_m\\_code=HH&total\\_record=75&page=65&search=](http://www.mofat.go.kr/ko/division/am_2_view.mof?seq_no=666&b_code=latest_3&div_m_code=HH&total_record=75&page=65&search=))

### 1. 會談 概要

- 2004.2.25(수)-28(토)간 북경(조어대)에서 회담 개최
  - 전체회의 외에 수석대표 회의, 차석대표 회의, 남·북, 미·북 등 양자협의 및 한·미·일 3자협의 개최
- 북한 핵폐기, 대북 안전보장, 핵동결 對 상응조치, 회담 정례화 및 실무그룹 구성 문제 등에 대한 참가국간 심도있는 협의
- 참가국간 아래 주요 합의사항을 의장성명 형식으로 발표
  -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참가국들의 의지 표명
  - 금년도 2/4분기내에 북경에서 제3차 6자회담 개최 및 실무그룹 구성 합의
  - 핵문제 해결 및 상호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조율된 상호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 2. 主要 事案에 대한 參加國 立場

#### 가. 핵폐기

-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 CVID) 방식으로 핵폐기를 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 표명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 표명
- ※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여부 판단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불가침 약속, △미·북 외교관계 수립, △북한과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불방해 제시

- 중·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CVID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

## 나. 대북 안전보장

- 우리는 잠정적 안전보장을 거쳐 단계적으로 강화된 서면 다자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구상 제안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중의 하나로 대북 불가침 약속을 제시하는 선에서 언급
-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음을 재확인
- 일·중·러는 핵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 틀내에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다. HEU 프로그램

- 한·미·일 3국은 북한이 HEU 프로그램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함을 강조
- 북한은 HEU 프로그램 존재 부인
- 중국은 HEU 프로그램이 있다면 동결 및 폐기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다만, 이 문제로 인해 회담이 파국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점 강조

## 라. 핵동결 對 상응조치

-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첫단계로서 핵동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보상 요구
- 우리는 북한의 '핵동결 對 대응조치' 제안에 대해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핵활동, 핵물질 및 관련시설을 동결하고(동결의 범위), △이를 검증하며(동결의 검증), △핵폐기 안 마련을 위한 단기간의 동결(동결의 기간)을 제의
  - 북한이 이를 수용할 경우 동결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 참가국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용의 표명

- 중·러는 일정한 조건하에 핵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6자회담 틀내에서의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중임을 표명
- 미·일은 CVID 실현을 위한 첫단계 조치로서 핵동결 對 에너지 지원을 추진하는 우리의 제안에 이해와 지지 표명

### 3. 會談 結果 評價

#### 가.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틀 마련

- 많은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설정했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
- 2002.10월 핵문제 재 대두 이후 관련국간 최초의 서면 합의 도출
  - 북핵 문제 해결 원칙과 향후 회담 진행의 방향성을 제시, 6자회담 과정 진전의 모멘텀 마련
- 차기회담 및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 대화과정을 안정화하고 회담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차기회담을 2/4분기내에 북경에서 개최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회담 촉진자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보

#### 나. 실질문제 협의를 위한 기초 마련

- CVID 문제, 핵동결 對 상응조치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1차 회담에 비해 토의 양상이 진전
- 다만, 핵폐기 및 동결의 범위, HEU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향후 회담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점과제

#### 다. 회담 진전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 수행

- 주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참여국간 논의의 기초를 제공
- 한·미·일 공조하에 회담 진전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중국과 적극적 협력 관계 유지
  - 2.24 남북 양자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폐기 필요성 설득 및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협력 촉구

- 회담 기간중 외교장관이 Powell 장관에게 전화, 합의문건 채택을 협의

#### 4. 向後 對處方向

- 2차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미·일과 향후 대처 방향 긴밀 협의
  - 외교장관의 미국, 일본 방문시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구체방향 협의
  - 2차 6자회담에서 제의한 우리의 구상을 기초로 한·미·일 공조와 중·러와의 협조 계속
- 3차회담 및 실무그룹 적기 개최를 통해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타 참가국과의 협조 강화 /끝/

## 자료 3. 第1次 6者會談 結果

외교통상부 작성 (2003년 9월 1일)

([http://www.mofat.go.kr/ko/division/am\\_2\\_view.mof?seq\\_no=330&b\\_code=latest\\_3&div\\_m\\_code=HH&total\\_record=75&page=33&search=](http://www.mofat.go.kr/ko/division/am_2_view.mof?seq_no=330&b_code=latest_3&div_m_code=HH&total_record=75&page=33&search=))

### 1. 會談 概要

- 일시 및 장소 : 2003.8.27(수)-29(금), 베이징(釣魚臺)
- 주요 일정
  - 8.26(화) : 양자 및 3자 사전 협의, 왕이 부부장 주최 리셉션
  - 8.27(수)-28(목) : 전체회의 및 양자·3자협의, 리자오싱 외교부장 주최 만찬
  - 8.29(금) : 폐회식, 탕자쉬안 국무위원 예방
- ※ 남북 양자회담 1회, 기타 수석대표 접촉 수회 진행
- 회의 진행 경과
  - 첫째날 전체회의를 통해 각국의 기조연설 청취, 오후 각국 양자접촉 진행(이 과정에서 미·북도 양자접촉)
  - 둘째날 전체회의시 전일 기조발언에 대한 추가적 토의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북측은 미·북 양자접촉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을 비난하였으나, 미측이 이에 차분하게 대응, 회담 지속
  - 셋째날 폐막식에서 주최국인 중국은 6자회담 지속 및 조속한 시일내 외교채널을 통한 2차회담 시기/장소 결정 등이 담긴 회의 결과 요약 발표
- ※ 중국측 회의결과 요약
  - ①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② 한반도 비핵화 유지 및 북한의 안보관심사 해결
  - ③ 단계적, 동시 또는 병행실시 방식 추진
  - ④ 회담 진행중 사태 악화·고조 행동 자제
  - ⑤ 대화유지, 신뢰증진, 이견축소, 공동인식 확대
  - ⑥ 6자회담 과정 지속, 외교채널을 통해 차기회담의 시간 및 장소 조속 확정



## 2. 主要 事案別 各國 立場

### 가. 핵문제 해결 원칙

- 회담 참가국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고, 핵무기를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입장 천명
  -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변경시 핵계획 포기 가능 입장 표명

### 나. 핵문제 해결 방안 제시

-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3단계 상호 병행조치 제안
  - 1단계 : 문제 해결 의지 표명
  - 2단계 : 핵폐기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
  - 3단계 : 참여국간 포괄적 관계 개선
  - ※ 중국은 우리의 단계적 해결방안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미국은 우리 구상이 한반도 비핵화에 유익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언급
- 미국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아니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요소를 설명
  - 북한의 핵폐기 이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 북한관련 주요사안 해결을 추진한다는 개략적 방안 제시
- 북측은 지난 4월 북경 3자회담시 제기한 방안을 다시 제안
  - 문제 해결 방식으로 ‘동시 이행’ 원칙 강조

### 다. 핵폐기 문제

- 한·미·일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폐기할 것을 촉구
- 북한은 先 핵폐기 및 조기사찰 수용 불가 입장 견지(미·북간 ‘동시이행’ 원칙 주장)

- 중·러는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폐기와 북한의 안보 우려 동시 해소 필요성 지적

## 라. 대북 안전보장 제공 문제

- 미국은 대북 불공격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불가침 조약 체결은 불가하다는 입장 천명
  - 미국은 (북한 등) 모든 나라와의 우호적, 호혜적 관계 수립 희망 의사를 표명하며, 안보우려 문제는 추후 회의시 구체 논의 입장 피력
- 북한은 미국만이 유일한 위협이므로, 다자적 안전보장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미·북 불가침 조약 체결을 주장
- 중·러는 북한의 안보우려에 대한 이해 및 해소 필요성 강조

## 마.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문제

- 한·미·일은 북측의 핵폐기 이행시 대북 에너지 제공 방안 검토 입장 표명
-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시 과감한 대북 경제발전 지원 의지 표명 및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 실현 비전 제시
- 중·러는 문제 해결의 요소로서 대북 경제 협력 추진 필요성 지적

## 3. 第1次 6者會談 結果 評價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과정 시작
  - 각국 입장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 심화 계기 마련
  - 다만, 금번 회담 과정에서 표출된 미·북간의 첨예한 입장 대립 조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필요 예상
-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포괄적·단계적 해결, 6자회담 지속 등 원칙에 대한 대체적 공감대 형성
  - 상호 신뢰 조성 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

○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통한 상황 관리 여건 조성

- 차기회담 개최원칙 양해에 따라 최소한의 대화 기조 유지 기대

○ 각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우리의 위상 확보

- 한·미·일 3자협의 및 남·북간 접촉, 중·러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원활한 회담 진행 분위기 조성

- 끝 -

## North Korea's Legacy of Missed Opportunities

**Mitchell B. Reiss, Director of Policy Planning**

Remarks to the Heritage Foundation

Washington, DC

March 12, 2004

North Korea's missed opportunities

- North Korea cheated on its commitments to the IAEA under the NPT thus inviting enormous international pressure;
- North Korea violated the Agreed Framework thereby ensuring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ut off benefits and apply its own pressure;
- North Korea broke its 1992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its brethren in the South, which included explicit provisions not to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 The North's 1998 ballistic missile test over Japan did more than almost any single event to stimulate the U.S. desire for missile defense and sparked a sea change in Japanese thinking about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 North Korea missed the olive branch extended by the South: it has been slow to follow up President Kim Dae-jung's historic June 2000 visit to Pyongyang and to reciprocate his Sunshine policy and President Roh Moo-hyun'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thus sustaining residual distrust;
- The North routinely demands more food assistance, yet its refusal to allow normal monitoring of aid precludes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onors from considering the greater assistance Pyongyang claims it needs. On this point, it also needs to be said that a fundamental source of this problem is North Korea's refusal to undertake the agricultural reforms needed to fill the needs of its people;
- Let us not forget also that North Korea failed, for 10 months, to take up the Bush Administration's offer in 2001 to meet anytime, anyplace without preconditions, thus precluding the possibility of progress early in the Presidents' term; and
- Finally and more broadly, as the Cold War ended North Korea has been painfully slow to learn the lessons of the Chinese and Vietnamese economic reforms, wasting a decade and falling further behind the economic dynamism that characterizes the rest of the Asia-Pacific region.

Other questions North Korea must answer in the Talks are these: Will its representatives eliminate the inconsistency in their statements and tell us clearly what North Korea wants? Can they speak without ambiguity? The North must start speaking straight ?with us, and with the world. Inevitably, the burden in the Talks must be focused squarely on the North. What does it want? And what is it prepared to do ?not just say ?to make that possible?

Instead, North Korea must make up its mind to get righ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ther countries, such as Libya, have made this choice. The lesson of Libya is that a country can begin to come in from the cold. But as Colonel Qadaffi appears to have learned, abandoning WMD is the first price of obtaining such assistance. Again, as

President Bush stated clearly with respect to the example of Libya, Leaders who abandon the pursuit of WMD and their means of delivery] will find an open path to bett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free nations.

### **Transformed North Korea, Transformed Relations**

In the abstract, all of these things should be part of a transformed relationship with a transforming North Korea. But we will, in the first instance, require a permanent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Beyond that, our objectives extend further than just a North Korea without nuclear weapons. As the North Koreans know well, our objectives are more encompassing. We do not simply seek a D.P.R.K. without WMD, but the transformation of the D.P.R.K. into a Normal state.

Indeed, a North Korea that resolves our concerns and those of its neighbors, including unanswered questions about its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might come to enjoy much of what has altered the very landscape of East Asia in recent decades, transforming streets and raising skyscrapers from Seoul to Singapore. These include:

- The benefits of people-to-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 Progressive removal of economic sanctions, tied to compliance on WMD and other commitments;
- Removal from the U.S.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 Opportunities for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with agriculture, industrial retraining, education, financial expertise, economic management, and defense conversion; and
- Ultimately,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 

But if North Korea will not act, it will find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and other partners equally prepared to respond with measures that ensure North Korea cannot threaten our countries or international stability. We are taking steps to enforce our laws against narcotics trafficking and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These steps are ongoing and unrelated to the Six-Party Talks. We are entitled to expect legal behavior from all countries. With or without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North Korea must cease its exports of dangerous weapons and the wide scope of its illegal activities.

We will pursue our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e will pursue initiatives against drug smuggling and counterfeiting. We will insist on full accountability by the North Korean regime and its agents for their behavior.

## **The Bush Administration's Nonproliferation Policy: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Testimony b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John R. Bolton to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March 30, 2004

### **North Korea**

Ensuring a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remains a central Bush Administration focus. The quickest and easiest route to achieving this goal would be for North Korea to make the same historic decision that Libya made, and abandon the pursuit of WMD in a verifiable way. North Korea should take note that Libya opened itself up voluntarily to full transparency about its weapons programs, and that, with continued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 completely transformed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may be possible.

Absent a Libya scenario, we believe that the best way to achieve our goal of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s through the Six-Party Talks. But let me be clear -- the Six-Party Talks are a means to an end. We are not talking simply for the sake of talking. As Secretary Powell has stated, we want and expect "tangible" progress and results, which will serve the national security goals of the United States, and which coincide with those of North Korea's neighbors.

Nonetheless, the dangers presented by North Korea's ongoing nuclear weapons program -- not to mention risk that Pyongyang might export nuclear expertise, technology, fissile material, or even transfer nuclear weapons, which they have threatened to do -- are too serious to ignore.

The greatest obstacle to a successful conclusion for the Six-Party Talks remains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date to address the problem honestly. The DPRK dictatorship contends that the lack of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is because the U.S. refuses to abandon its "hostile" policy. It cites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and activities such a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s examples of this "hostile" policy. As for the presence of U.S. troops in South Korea, they are there because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ant them there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Moreover, Pyongyang's criticism of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is akin to drug lords complaining about drug laws. If North Korea has a problem wit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here is an easy solution-get out of the proliferation business. It is time for North Korea to embrace the principles of the free market in industries besides weapons of terror and illegal narcotics.

The real obstacle to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remains North Korea's unwillingness to commit to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programs. Setting aside the crucial issue of verification for a moment, let me

discuss what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mean when we talk about the complet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In order for dismantlement to be "complete," North Korea must give up not only all elements of its path to nuclear weapons based on the reprocessing of plutonium, but also its nuclear weapons path based on highly-enriched uranium.

And, in order to ensure that the world will not continue to be at risk from the threat of the DPRK's ongoing nuclear-weapons activities, this dismantlement must be "irreversible," which will require North Korea to abandon both its so-called "civil" and "peaceful" nuclear programs and permit the removal of all critical items.

North Korea also does not accept our definition of "irreversible." In December and January, Pyongyang offered some indication through public pronouncements that it would be willing to "freeze" its plutonium program, including the five-megawatt reactor at Yongbyon. This was only a freeze, mind you, which would, by definition, be neither complete nor irreversible, but North Korea wasn't willing to stick with even this tepid promise. At the last round of Six-Party Talks, however, the DPRK reversed course, claiming that only those facilities directly related to the weapons program would be subject to a freeze, assuming, of course, that adequate compensation were provided. The idea that the Yongbyon facility serves any peaceful purpose is untenable. The amount of electricity it could produce is minimal, and it is questionable that North Korea even has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in place by which to distribute it.

North Korea must declare and fully account for all of its nuclear activities and subject them to effective verification measures. While the exact modalities of this verification regime are to be worked out -- in part because of it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NPT last year and the removal of international inspectors and monitoring equipment -- one could reasonably expect some of the five legitimate nuclear weapons states, which are also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would play a role in dismantling the weapons and extracting all weapons design information from North Korea. Other inspectors, with the IAEA playing an essential role, would undoubtedly assist in verifying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programs.

Unfortunately,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clear that they have no intention to dismantle their faciliti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ay, claiming as recently as last Saturday, "How can our Republic accept such a thing?" In this statement, their clearest to date, North Korea made the absurd claim that inspectors would "ransack" their country as a pretext for U.S. intervention. They also unequivocally stated that they would not dismantle their so-called peaceful nuclear reactors. In the eyes of North Korea, the solution is for us to "compensate" them, even for just a "freeze" of the weapons aspect of its nuclear program. It would appear, as President Bush has stated before, that North Korea is "back to the old blackmail game." This time, however, it will not work. We will not follow the mistaken path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because as Secretary Powell has said, "we bought that horse once." We will not provide inducements or reward the

North Koreans to come back into compli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Fundamentally, Nor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at the end state is not a freeze, but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all their nuclear programs, including the Yongbyon facility.

While I have focused my remarks on the nuclear programs of the DPRK, the Six-Party Talks have also provided a vehicle to identify other critical issues of concern. These issues, which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have raised in both previous sessions of the Six-Party Talks, include the disposition of conventional forces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North Korea's other WMD programs involving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its outward proliferation record, with particular regard to missiles constraints on DPRK's indigenous missile programs that threaten the U.S. and its Asian allies, and its dangerous exports of destabilizing missiles and missile technologies. Moreover, we must also deal with North Korea's abysmal human rights record, such as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We do not raise these issues because we want to set the bar higher for any negotiated settlement with North Korea. While our long-term goal remains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we know that any interim solution will require a comprehensive change in North Korean behavior. Given its past violations of agreements, its extensive, well-documented program of deception and denial, its dangerous proliferation activities, as well as its terrorist activities and it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North Korea must know that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can only become fully normalized when it deals with all of our concerns. They must make this strategic decision themselves, or face continued isolation and other unwelcome consequences. The Six-Party Talks can help to persuade North Korea and its neighbors that such a decision is in its own interests as well as those of it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he choice is Kim Jong Il's.



May 3, 2004

**QUESTION TAKEN AT THE MAY 3, 2004 PRESS BRIEFING  
NORTH KOREA - KELLY REMARKS**

Question: Did Assistant Secretary Kelly offer a peace treaty to the North Koreans if they abandoned their nuclear program at the last round of Six Party Talks?

Answer: In testi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March 2,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James Kelly commented that the numerous and intensive security dialogues of Europe do not exist in Asia, and he further noted the possibility that the Six-Party Talks might, after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 used to discuss broader issues of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It was in the framework of this possibility that, in February, at the second round of Six-Party talks in Beijing, Assistant Secretary Kelly expressed our hope that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would lay the basis for even further progress toward lasting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In that regard, he suggested that, after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the six parties might be able to work together to seek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permanent peace mechanism.

(end text)

(Distributed by the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U.S. Department of State. Web site: <http://usinfo.state.gov>)

May 4 2004

**Six-Party Format Could Be Used for Korea Peace Treaty**

Kelly says priority is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United States might consider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but only after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through the Six-Party Talks, the State Department said May 3 in response to a question taken at its regular briefing the same day.

According to the State Department,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James Kelly suggested at the second round of Six-Party Talks in Beijing in February that, "after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the six parties might be able to work together to seek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a permanent peace mechanism."

The participants in the Six-Party Talks are North Korea, South Korea, China, Rus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Spokesman

U.S. Department of State  
**An Overview of U.S.-East Asia Policy**

**James A. Kel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Testimony before the House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Washington, DC

June 2, 2004

Mr. Chairman, members of the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testify on the Administration's strategy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I welcome this opportunity because we have a good, positive story to tell in this dynamic and ever-changing region.

First, let me thank Chairman Leach for his service in leading the American people's delegation to the May 20 inauguration of President Chen of Taiwan. Your longstanding interest in Taiwan underscores the respect we feel for the people of Taiwan, their democracy and our commitment to working with the new Chen Administration. And, your presence delivered a clear and unambiguous signal to Taiwan and the P.R.C. on the importance of reducing tens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It is not my intention today to speak at length on our unofficial relations with Taiwan because it was covered extensively in my April 21 testimony to the full Committee. I will say only that we welcome the inaugural address of President Chen Shui-bian. By making clear his administration's commitment not to take unilateral steps that would change the status quo and underscoring its openness to seeking accord with Beijing, President Chen is helping to restore dialogue across the Taiwan Strait.

### **Democracy**

Mr. Chairman, East Asia is riding a wave of favorable trends and none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gion-wide strengthening of democracy.

The remarkable April 15 elec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wept into the National Assembly a number of younger politicians representing a new generation of voters. On April 5, Indonesians went to the polls for Parliamentary elections, which were exceptionally well conducted given the logistical difficulties in holding elections in that huge archipelago nation and were free and fair.

We also congratulate the Philippines on the conduct of their relatively peaceful elections last month. Taiwan's elections in March confirmed its young but vibrant democracy and Malaysia's elections also took place smoothly and strengthened new Prime Minister Abdullah Badawi.

In months to come, East Asians can look forward to a first-eve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Indonesia as well as elections in Mongolia, Malaysia, Japan, Thailand, Singapore, Australia, and even Hong Kong, for half of the Legislative Council seats. No serious observer can doubt that democracy has truly taken root in East Asia and is flourishing.

### **Rejection of Radical Islam**

A second trend that I would like to highlight is the widespread rejection of radical Islam in Southeast Asia. Although we have legitimate concerns about terrorism and are working hard with governments in the region to combat it, the fact is that the terrorists are relatively few in number and radical Islam appeals to a very small segment of society.

The region benefits from, and the U. S. deeply respects a longstanding tradition of tolerance, pluralism, and religious moderation. If we overlook that tradition, we are misreading the situation and the desire of the majority for the peaceful resolution of religious and political differences.

## **Prosperity and Integration**

Throughout the region, there is growing prosperity, strong GDP growth in almost every economy, and a healthy movement toward greater economic openness and lower trade barriers.

We see expanding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East Asia. This is occurring not only through traditional fora such as ASEAN, the ASEAN Regional Forum security dialogue, and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forum but also in new mechanisms, such as the Six-Party Talks. These talks were created for a specific goal, to address and to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conceivably could form the basis for a permanent Northeast Asia forum at some point in the future.

Another factor is that glob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made a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lives of East Asians. The World Bank reports that in China alone, 400 million fewer people are in extreme poverty than 20 years ago.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flows have lifted millions of East Asians to higher standards of living, encourage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onvinced East Asian nations to look beyond their borders for markets, investment capital, higher education, and ideas.

## **Peace**

Finally, this is an area largely at peace. Although there are a handful of local separatist conflicts and the potential remains for large-scale conflic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Taiwan Straits, the major states of the region are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and building stronger regional ties.

Together, these trends are in sync with U.S. interests and values and that fact make us optimistic for the future. We are convinced that the region's most intractable issues -- including the threat of terrorism as well as North Korea and the Taiwan Straits -- can be resolved peacefully in ways consistent with these trends.

We are working to achieve policy goals with the active assistance and coordination of our alliance partners. Our alliances in East Asia are stronger and deeper than ever.

Our five traditional allies --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Philippines, Australia, and Thailand -- are our strategic partners in and beyond the region. We share with them a common perspective on a steadily increasing range of interests.

With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South Korea, we are proceeding apace ahead with negotiations for modernizing and adjusting our military force posture in those countries. In this endeavor, there has been exemplary cooperation between the Departments of State and Defense, which will co-chair these discussions.

Driven in large part by the forces of globalization, Japan is in the midst of its greatest soci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 a change that has important consequences for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world. Japan continues to play a positive role in East Asia, and its bold participation in coalition activities in Afghanistan and Iraq underscores Japan's determination to become more active elsewhere in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llies.

The Japanese Diet passed historic, passionately debated legislation to allow its Self-Defense Forces to be deployed abroad. Japan's decision to deploy approximately 1,000 Self Defense Forces to Iraq and the surrounding area, where they provide humanitarian and reconstruction assistance and airlift support, and its support for the global war on terror has come to symbolize Japan's active and outward-looking foreign policy under Prime Minister Koizumi.

The deployment complements Japan's many other actions on behalf of the Iraqi people, which include the Madrid Conference pledge of \$5 billion over 4 years, and its commitment to solving the issue of Iraq's crippling debt burden. Japan continues to provide fuel, free of charge, to support the Operation Enduring Freedom interdiction efforts and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high-priority task of restoring Afghanistan's

highway system. Japan's economy is on the rebound and we hope it can be sustained, leading to renewed growth and a continuation of vigorous foreign policy in support of our commonly held objectives.

We are also very pleased at the sustained support of the Roh Administration for the war on terror and its deployment of a 3,000 man contingent of South Korean troops to Iraq.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the third-largest troop contributor to coalition forces, after the U.S. and U.K. This is a welcome development from a steadfast ally, a major trading partner, and a serious contributor to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made clear that it understands the reasons for the deployment of a brigade of U.S. troops from the Second Infantry Division in South Korea to Iraq, accepts it as a needed measure, and is confident that this deployment poses no threat to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ituation on the ground in Iraq has changed rapidly, and this has required nimble planning and fast responses by our military.

Long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since 9/11 the Philippines has emerged as a valued and supportive partner, sharing our policy goals, and sending its own men and women to help in Iraq and to restore order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nd the United States has reciprocated by providing the Philippine military with counterterrorism training to help put down violence and terrorism in its own back yard.

In fact, in a reflection of Asia's increasing acceptance of broader responsibilities, each of our allies -- and Australia and Thailand rate special mention -- has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efforts to stabilize Iraq and Afghanistan -- whether it be with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technical and engineering support, or combat troops. Our allies have proven their dedication not only in their material support, which has been extensive, but tragically in human lives lost.

Countries that are not de jure allies can also be effective partners in building regional security and we are strengthening those relationships too. Most notably, we are negotiating with Singapore to reach a Strategic Framework Agreement, which will expand our defense cooperation against terrorism and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s is a tangible outgrowth of President Bush's October 2003 visit to Singapore.

Enriching but complicating our sense of optimism is our revitalized relationship with China. China will have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future of Asia even though it is not clear yet what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andscape of Asia will ultimately be, say, 50 years from now.

China is now our third-largest trading partner with total trade in 2003 of more than \$180 billion and our fastest-growing export market with exports increasing nearly 40% in the first quarter of 2004. Of course, exports to us from China continue to far exceed our exports, yet China has a worldwide trade deficit.

As China's economy continues to grow -- at a staggering rate of nearly 10% in the first quarter -- there are increased opportunities for American commercial interests. That growth is also matched by considerable concern that China's huge appetite for certain commodities and energy is already creating shortages and price pressure in global markets. China is now the world's second-largest consumer of oil, after the United States, and accounted for 35% of the global rise in oil demand in 2003. Clearly, China trade is changing patterns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goods around the world, and its leaders have a major task if they are to avoid overheating the economy.

China's enormous stake in maintaining access to the U.S. and regional markets and preserving the international trading regime has had an impact on its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During the April meeting of the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we were able to make some important progress on trade issues with China in the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reless encryption standards, and trading rights and distribution services.

We could easily devote several hearings to our complex relationship with China,

including such critical issues as non-proliferation, WTO compliance, and our efforts to promote democracy, legal reform, and human rights.

In the key area of security, by being a strong and reliable partner on the counter-terrorism front and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Six-Party Talks, China has proven that where its interests coincide with ours, it can be extraordinary helpful in enhancing regional stability. It also shows promise that it is prepared to take on global responsibilities.

In other areas, China is challenging the status quo aggressively. It is expanding it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by enhancing its diplomatic representation, increasing foreign assistance, and signing new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I note that a recent exchange of senior official visitors between China and Cambodia resulted in 25 bilateral agreements. They range from agreements to conduct feasibility studies for a hydropower plant to grant and loan agreements covering textile and cement plants, tourism, highway constr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golf club. These agreements involve relatively little in financial terms, but they serve notice of how China is using its newly won economic power to expand its presence and political influence among its southern neighbors. While we welcome constructive engagement by China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need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engaged with the nations of Southeast Asia.

#### **Time of Transition**

Mr. Chairman, the trends which are present in East Asia are not abstract ideas or academic concepts. They are promoting tangible and dramatic changes in personal lives and public policy. My visit to Indonesia, Vietnam, and Hong Kong last month impressed me again that this is a time of transition in East Asia.

In Jakarta last month, the excitement over the upcoming July 5 Presidential election was palpable. The first direct election for the Presidency in Indonesia represents a remarkable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that nation's democratic institutions. A president accountable to the Indonesian electorate will be able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the country's needs. The outcome of the election could have powerful implications because a strong and thriving Indonesian democracy would prove that democracy and Islam are not incompatible.

In Yogyakarta, where I led the U.S. delegation to the ARF Senior Officials Meeting last month, I had a chance to visit both Hindu and Buddhist temples. They exist peacefully and proudly among mosques of the predominant Muslim religion, and with Christian churches visible too. I was struck by the tolerance exhibited by the Muslim mainstream community in Indonesia, the country with the world's largest Muslim population.

On the same trip I also participated in a political dialogue with senior Vietnamese officials in Hanoi and visited Ho Chi Minh City for the first time in almost 30 years. There have been extraordinary changes and I was impressed by the emerging prosperity and entrepreneurial spirit of the Vietnamese people and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of Vietnam to pursue closer ties with the United States.

We are moving forward in our economic cooperation with Vietnam, with the implementation of a bilateral trade agreement that has led to a striking increase in trade. Such an increase brings with it inevitable frictions, which we are working to resolve. We continue to receive cooperation from the Vietnamese on POW/MIA accounting and I note that our military-to-military ties have also expanded. We see a positive trend in our joint cooperation in counter-narcotics and counter-terrorism efforts. The most significant area of concern where we have not seen the positive progress we would like to see is human rights.

The analogy that comes to mind about U.S.-Vietnamese relations is that of a river. The current of our bilateral relations is strong, deep, and moving well. Human rights and religious freedom issues are the eddies and back currents that are holding up progress.

We continue to address these concerns through increasingly frank discussions as we welcome the positive developments of our relations. When I met with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Foreign Minister, I emphasized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is in Vietnam's best interest, not just to respond to international criticism, but for the Vietnamese people to reach their potential.

Although I was only briefly in Hong Kong on this trip, I have passed through it many times. I understand the disappointment that many people feel about Beijing's decision on April 26 to delay movement toward representative government through direct elections and universal suffrage. I applaud the efforts of Hong Kongers to express their concerns about China's efforts to silence individuals whose views are at variance with those coming out of Beijing.

In my view, Beijing's April 26 decision reflect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sophistication and patriotism of the Hong Kong electorate. The one country, two system framework may be being undermined. The people of Hong Kong understand that a free press, an educated citizenry, and rule of law -- the foundation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long present in Hong Kong -- have been core features of Hong Kong's civil society. These also are what give international investors and businesses confidence in Hong Kong's future.

The U.S. is committed to supporting Hong Kong's autonomy and the protection of its civil liberties, and we urge the Hong Kong Government -- as I told Chief Executive Tung Chee-hwa during our meeting on May 16 -- to be responsive to the aspirations of the Hong Kong people. By ignoring those aspirations, he and the Beijing government will erode the very foundations that can continue to make Hong Kong great. We will watch with interest the peaceful demonstrations expected this week, the 15th anniversary of Tiananmen.

### **Policy in a Time of Change**

At the top of our list of policy priorities is waging the war against terror, a threat that respects no national borders, but is most dangerous in Southeast Asia. Because it is transnational, terror must be addressed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which we have made the focus of our efforts.

The region's governments have put hundreds of terrorists behind bars, but there is still much more to be done to thwart future attempts to commit terrorist attacks, which seem all but certain to occur.

We are addressing terrorism through a combination of careful intelligence liaison, police work, and targeted foreign assistance aimed at enhancing counterterrorism capacity. A case in point is Indonesia where we are assisting the National Police in their creation and training of a Counterterrorism Task Force. Members of the Task Force are already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of terrorist crimes such as last year's Marriott Hotel bombing in Jakarta.

We have good reason to believe that terrorists may turn to soft targets, including vulnerable sea lanes through which significant amounts of shipping and trade pass. We are now examining ways to enhance maritime security and discussing ideas about how a partnership of interested regional nations might identify, monitor, and address transnational maritime threats under exist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lthough our thinking will evolve as consultations continue with regional states, a collective effort should empower each participating nation with the timely information and capabilities it needs to act against maritime threats in its own territorial seas. Then each nation would be able to decide for itself what response, if any, it would take in its own waters. How the U.S. can help will be informed by the views of Southeast Asian states but could certainly include technology, training, and other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Under the ARF umbrella, we are planning to co-host with Indonesia and Malaysia a maritime security workshop in September 2004 in Kuala Lumpur to build capacity and to gain a more comprehensive view of the maritime environment and address potential

problems.

In APEC we are working to improve travel and transportation security, promot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standards, strengthen export controls, and help APEC members meet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afety (ISPS) code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Beyond terrorism and its various manifestations, we are confronted by a number of dangerous threats to stability and prosperity in East Asia. These includ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non-proliferation, a host of transnational issues and, in several countries, the persistence of authoritarian regimes and serious human rights problems.

The Six-Party Talks process is well established and even those countries in the region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talks are highly supportive of this process. The two plenary sessions, in August 2003 and February 2004 laid out clearly the basic principle of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 what we call "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indeed the North Koreans themselves have publicly and in the talks stated that their ultimate aim is denuclearization.

The mid-May working group sessions in Beijing gave each party to the talks a chance to clarify its positions. We look forward to an early third session of the plenary, perhaps preceded by another meeting of the working group. In the May working group session, the parties began exploring the structure of a resolution -- a structure that would involve concrete actions by North Korea with corresponding measures taken by other parties in a coordinated fashion. At the next working group and plenary round we hope to build on this emerging understanding of a possible resolution.

The Libyan experience has shown us that a nation can turn around its policies and maintain its integrity and independence. North Korea should examine this approach carefully.

We have been fully supportive of Prime Minister Koizumi's visit to Pyongyang. We are pleased that five abductee family members were allowed to go to Japan and that the Prime Minister reinforced the CVID message in his face-to-face discussions with D.P.R.K. leader Kim Jong-Il. Japan has kept the abductee issue on the agenda with the D.P.R.K. even as they continue to press for denuclearization. Similarly, we maintain our human rights concerns with North Korea as part of our broad agenda for discussions. Our b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continue to anchor our approach to the Six-Party Talks.

To address non-proliferation concerns, we are working towards implementing a global initiative,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which seeks to enhanc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stop illicit proliferation-related trafficking. While not directed at North Korea, North Korea is affected by PSI because it is the world's leading proliferator of missiles and missile technology. It is important to underscore that PSI activities are voluntary and fully consistent with national legal authorities and international law.

To address trade in counterfeit currency and illicit narcotics, we are developing an Illicit Activities Initiative in cooperation with a number of other nations. With our support, Japan has taken the lead in providing training on export controls and providing outreach on these initiatives.

An obvious exception to the positive trends I mentioned earlier, Burma stands out as the one military dictatorship remaining in ASEAN. By proceeding with a National Convention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key opposition groups, leaving Aung San Suu Kyi and other democracy leaders under detention, and not addressing its deplorable human rights record, Burma has caused consternation in the region. Clearly, a convention that does not include all elements of Burmese society cannot be truly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of Burma and lacks the legitimacy needed to make any real progress toward democracy or national reconciliation.

In fact, a year after the May 30, 2003, attack on Aung San Suu Kyi, the people of Burma are no closer to reconciliation and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 We

urge the Burmese junta to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We are steadfast supporters of the National League of Democracy. And, we believe the junta should allow the NLD to reopen its offices and to participate in a genuine and transparent dialogue.

Because our restrictions on Burmese imports represent a clear and forceful expression of our disapproval of developments in Burma, we support their extension. They are key components in our policy to br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to Burma and we will maintain our strong stance until we see tangible progress in both these areas.

I should note that Thailand also faces difficulties with a rise in violent incident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its southern, Muslim-dominated provinces. These have included arson attacks on schools, bombings, and killings of police and other officials as well as a series of assaults on police stations that resulted in over a hundred deaths.

There appear to have been multiple causes of these incidents, including the inattention of the government to recent social and political developments in the southern provinces. The Thai Prime Minister has toured the area and Thai authorities are reviewing the situation carefully, increasing security, and taking steps to address the problem. We are confident that they will arrive at a solution.

Finally, you will note that I have referred frequently to regional organizations throughout this testimony.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se organizations is essential to East Asia. They are the foundations of our regional cooperation on transnational crime, trafficking in persons, contagious diseases, environmental protec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terror.

The purpose of my visit to Indonesia in May was to lead the U.S. delegation to the ARF Senior Officials Meeting. ARF is becoming an increasingly effective forum to exchange views and to buil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t has taken on new responsibilities in areas such as transport security, where it was not engaged just a few years ago.

With our active participation, ARF has in the last 2 years produced four statements encouraging states to take concrete actions, on their own or multilaterally, in the war on terror, on non-proliferation, and on transnational crime. ARF may still be a "forum," but it is increasingly useful to promote collective action. In July, the ARF Ministers will also approve the strengthening of ARF as an institution by establishing a permanent, though initially small, Secretariat.

With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organiz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recently, several of which exclude the United States, we need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s in which we are a member, such as the ARF, ASEAN, and APEC.

We are moving forward aggressively to implement Secretary Powell's ASEAN Cooperation Plan, which seeks to strengthen U.S. relations with ASEAN and to enhance cooperation on a broad range of key transnational issues, from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disaster management to counter-terrorism.

We are also working to implement the President's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EAI) which offers the prospect of FTAs between the U.S. and ASEAN countries that are committed to openness and reform. Singapore is the first beneficiary of a FTA under the EAI, and we will begin negotiations with Thailand at the end of the month. In addition, we have deepened our trade dialogues with countries like Malaysia, Indonesia, the Philippines, Brunei, and Vietnam as part of AEI. We also support Normal Trade Relations for Laos. Trade has been a powerful tool for positive change elsewhere in East Asia and can be a force for progress in Laos as well.

In APEC, because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complement one another, we are pursuing both agendas simultaneously. We want APEC to push for trade liberalization by re-energizing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which seeks increased market access for agriculture, manufactured goods, and services; an end to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progress in services negotiations; and expanded trade facilitation.

Last year, in its Bangkok meeting, the 21 leaders of APEC agreed to focus on



ensuring personal security as well as on promoting the economic prosperity. They agreed to dismantle terrorist groups, eliminate the danger of WMD, and confront other security threats. For 2004, it is important that the leaders carry through on their commitment by improving port security, adhering to nonproliferation regimes, strengthening export controls, and developing a MANPADS action plan.

In sum, we have a full and active policy agenda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as it moves in overdrive into the future. "Nothing may be permanent except change" in East Asia but we are encouraged by the progress we have seen in the region and optimistic that our efforts will be successful.

[End]

Released on June 2, 2004

**<조선외무성 대변인>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 (2002. 10. 25)**

(평양 10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때에 미국이 계속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북남, 조로, 조중, 조일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북남철도의 련결과 일본과의 과거청산을 비롯하여 지난 세기의 낡은 유물들을 없애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우리는 변화된 현 정세와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관리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하고 경제특구를 내오는 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실천적기여로 된다.

그러므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지지환영하였고 우리는 여기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털어 버리고 평등한 립장에서 현안문제들을 풀어 나갈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전에 미국대통령의 특사를 받아 들였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특사의 방문을 통하여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역전시키려는 부쉬행정부의 적대적기도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미국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제조를 목적으로 농축우라늄 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 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특히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 가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너무도 일방적이고 오만무례한 미국의 태도는 놀라움을 자아 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강도적론리가 우리에게 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미국은 크게 오산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근 반세기전부터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방대한 핵무기를 저축해 놓고 작은 나라인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해 옴으로써 산생된 문제이다.

19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으나 미국은 그 리행문제에 대해 이미 말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

기본합의문의 제1조에 따라 미국이 우리에게 경수로발전소들을 2003년까지 제공하는 대신 우리는 흑연감속로와 그 련관시설들을 동결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가 핵시설들을 동결한지 만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경수로는 기초구덩이나 파놓은데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될 계획이었던 2003년에 연간 100만키로와트, 그 다음해부터는 연간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손실만 보게 되었다.

기본합의문의 제2조에 따라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 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8년동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제 와서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그러한 담보제공 대신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기본합의문 제4조와 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량해록 제7항에 따라 우리는 경수로의 <타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듯이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

이번에 우리는 비공개량해록을 이처럼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결국 기본합의문의 4개조항중에 미국이 준수한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애초에 미국이 합의문을 채택할 때 리행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만간에 붕괴되리라는 타산을 가지고 거짓수표하였는지는 미국만이 알 일이다.

그러나 부쉬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것은 명백히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서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무효화시킨것이다.

부쉬행정부는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핵무기전과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유린하였으며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해 버렸다.

부쉬행정부의 무모한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책동으로 하여 우리의 생존권은 사상 최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단순한 사고는 없을것이다.

우리는 미국대통령특사에게 미국의 가증되는 핵압살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해 주었다.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를 놓고 이보다 더 알맞는 대답은 있을수 없다.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달려 드는 미국에게 그 무엇을 해명해 줄 필요가 없으며 그럴 의무는 더우기 없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의 아량을 가지고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약속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혀 주었다.

지금 미국과 일부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무장을 놓은 다음에 협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논리이다.

우리가 별거벗고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단 말인가.

결국 우리 보고 굴복하라는것이다.

굴복은 죽음이다.

죽음을 각오한자 당할자 없다.

이것이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한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약속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의 제거이다.

이 기준점을 충족시키는데는 협상의 방법도 있을수 있고 억제력의 방법도 있을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다.

평 양

주체91(2002)년 10월 25일

(끝)

**<조선외무성대변인>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 제거위한 것(2003.2.18)**

(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대결국면으로 몰아 가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18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지금 미국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상황을 더욱더 대결국면으로 몰아 가고 있다.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조미직접회담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세계의 한결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조미회담이 우리에게 대한 보상으로 되기때문에 응할수 없다는 괴이한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이다.

이미 명백히 한바와 같이 우리가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안한것은 미국이 우리 나라에 가하고 있는 부당한 군사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그 무엇을 얻어 먹자는것이 아니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고 정세가 오늘과 같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 기본원인은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군사적위협책동에 있다.

미국이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체로 잘 살아 갈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제도는 인민이 스스로 선택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 일심단결의 제도이다.

우리에게는 수십년간 품들여 건설한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토대와 잠재력도 있다.

우리 제도는 일시적난관에 못이겨 와해되거나 붕괴될 제도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그 누구를 협박하여 얻어 먹으려 할 필요나 그 누구에게서 <제도담보>를 받아야 할 필요가 애초에 제기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변나라들과 경제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철두철미 쌍방의 평등한 리익과 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며 최근 나라의 전반적경제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것도 새 세기의 변화된 현실적조건에 맞게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의 절대다수 나라들이 우리의 이러한 경제정책과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 환영하고 있지만 유독 미국만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잘되고 우리 나라가 강성번영하는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한사코 방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의 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그토록 회피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증대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취한 정정당당한 조치들은 선군정치에 따른 자위적목적외에 다른것은 없다.

이것을 립기응변식의 그 무슨 <벼랑끝전술>이라고 보는것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무도 모르는 자들의 망상이다.

현실과 망상은 량립될수 없다. (끝)

## <조선중앙통신> 른평 베이징조미회담결과를 평함 (2003.4.29)

(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베이징에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다시금 유엔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A P 통신보도에 의하면 4월 25일 부쉬행정부는 <북조선에 대한 유엔의 제재 조치를 추구할 가능성을 놓고 동맹국들과 협의> 할것이라고 밝혔으며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북조선핵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것이라고 보도했다. 남조선 MBC 방송도 <미국은 북의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다시 상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유엔을 도용하여 조선반도핵문제를 국제적문제로 전환시켜 세계적인 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보려는 미국의 집요한 책동이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뚜렷한 실증으로서 대화일방에 대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또 하나의 도전적처사이다.

미국은 이번 조미회담에서 우리가 저들의 <선택포기>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무슨 <폭탄성발언>을 하였기때문에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에 다시 상정시켜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부당한 논리이며 회담의 진척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한 저들의 고의적인 행위를 정당화하고 회담에서 시종일관 성근한 립장과 자세를 취한 우리측의 올바른 태도를 중상모독하기 위한 비렬한 술책으로 밖에 달리는 평할수 없다.

원래 이번 회담이 제대로 되자면 무엇보다 먼저 미국이 회담에서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대담하게 변경할 정치적의지를 밝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반도핵문제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라서 적대관계의 해소가 회담의 결실을 가져 올수 있는 선결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회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구태의연하게 종전의 일방적인 <선택포기>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미국이 주장하는 <선택포기>로 말하면 그것은 <검증가능한 사찰>을 전제로 하는 무장해제를 의미하며 <사찰>이 전쟁의 전주곡으로 된다는것은 이미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실증되었다.

령토도 적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완전무장해제되어 알몸의 신세로 <국제사회의 존경 받는 성원>으로 된다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더우기 저들의 리의를 위해서라면 유엔도 국제법도 휴지장처럼 무시하는 미국의 침략행위에 무엇으로써 대처해 나갈수 있겠는가.

사실상 <선택포기>는 약소국가인 우리가 해야 할것이 아니라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다른 주권국가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미국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핵문제의 당사자들인 조미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를 내놓았지만 미국은 빈주먹으로 참가하여 낚아 빠진 <선택포기>만을 우리에게 강요하였으며 결국 회담은 결실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이번 회담을 두 나라 사이의 현안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는 마당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여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기 위한 일방적인 압력공간으로 악용하였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바라는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행위로 하여 이번 회담이 결실없이 끝났지만 그것이 완전히 결렬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앞으로 조미대화가 다시 재개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금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 그 어떤 <제재>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대한 전쟁의 푸른 신호등으로 간주하고 자위적대책을 강구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공중타격에는 공중타격으로, 지상전략에는 지상전략으로 철저히 대응하여 침략자들을 일격에 소멸할수 있는 막강한 자위적국방력, 물리적억제력을 소유하고 있다.

대화와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는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해 나갈것이다. (끝)

##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봉쇄책동에 물리적보복조치를 경고 (2003.6.8)

(평양 6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봉쇄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은 이번 8개국수뇌자회의에서 <대량살륙무기전과방지안보체제>라는것을 내놓을 데 대한 <제안>을 들고 나왔다.

이 <제안>은 국제적으로 핵물질이나 미싸일부품 또는 그 제작에 필요한 설비, 재료 등을 수송하는 선박이나 비행기들을 검열단속할수 있는 제도적장치를 내놓자는것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같은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봉쇄를 합법화하자는것이다.

미국은 이미 우리 선박들이 많이 드나드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집합안전보장협정>이라는것을 명분으로 우리 나라에 반출입하는 물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국제적문제로 부각시켜 <국제적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한 미국의 봉쇄작전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지금 미국이 다자회담을 고집하며 우리와의 쌍무회담을 한사코 회피하고 있는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국제적압박과 봉쇄를 강화하기 위한 구실과 시간을 벌자는데 기본속심이 있다.

미국이 <국제적압박>과 그 무슨 봉쇄작전으로 우리를 붕괴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조선반도핵문제를 어떻게 하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땅우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야량에도 한계가 있다.

압박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도 그만큼 커지는 법이다.

우리는 일단 자주권이 침해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물리적보복조치로 대응할것이다.

선군정치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다져 온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나 <압력>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대한 봉쇄는 오히려 문제해결을 가로 막고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게 될 뿐이다.

우리는 미국의 봉쇄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 (끝)

**<조선 중앙통신>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개최-조선측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 제시 (2003.8.29)**

(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8월 27일 베이징에서 개막된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서 각 대표단 단장들의 기초발언이 있었다.

미국대표단 단장인 국무성 차관보 제임스 켈리는 미국의 목표는 북조선의 핵무기계획을 가시적인 검증에 의해 완전하게 불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조선이 핵무기계획을 검증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포기하여야 안전담보와 정치경제적 혜택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핵문제해결을 위해 미조쌍무회담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에야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미싸일, 상용무력, 위조화폐, 마약거래, 테러, 인권, 납치 등 문제들에 대한 미조쌍무대화를 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불가침조약은 적절치 않으며 필요되지도 않고 흥미도 없다고 하면서 북조선이 핵계획을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게 포기한다는것이 확인되면 다음회담에서 안보상 우려문제들을 다른 나라들과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김영일은 기초발언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과 관련한 원칙적립장을 밝히려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목표이다, 핵무기 그자체를 가지고 있자는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고 그를 실현하자는것은 일관한 립장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미국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조미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핵문제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다, 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명단에 포함시켰고 핵무기사용기도를 로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힘으로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대적대시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계획을 포기할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구속력 있는 호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이다 고 하였다.

그는 미국은 기본합의문리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미기본합의문체택이후 핵시설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다, 2002년 10월 켈리는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우라니움농축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결고 들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농축우라니움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강한 무기가 있다, 켈리의 방문이후 미국은 우리가 비밀핵계획을 인정하였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무태공으로 하여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은 백지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리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비핵화의 현실적방도이다, 동시행동을 반대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를 거부하는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것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을것이다, <조기사찰>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히었다.

그가 밝힌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 조미외교관계를 수립하며
- 조일, 북남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조선은 그대신

-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 미싸일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을 중지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밝힌 동시행동순서는

-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포기의사를 선포하며
-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 조미, 조일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이상과 같이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원칙적립장을 밝힌 다음 계속 하여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려는 념원으로부터 제안한다고 하면서 첫째로,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포기의사를 밝힐수 있다.

둘째로,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리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면 된다면 미국이 <선 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것으로밖에 달리 판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강화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회담에서는 중국, 로씨야, 남조선, 일본측도 기조발언을 하였다.

중국대표단 단장인 외교부 부부장 왕의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 측이 제기한 불가침조약체결, 미국과의 평화적공존 및 관계정상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무역관계수립요구는 긍정적이며 건설적이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불가침조약체결문제는 조미직접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선측이 제기한 안보우려는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계기로 조선반도에 평화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남의 근본 리익과 동북아시아정세안정수호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로씨야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로쭈꼬브는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호상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로 정도>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 로씨야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모든 지역나라들을 위한 믿음직한 안전을 유지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 시키는데 리해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남조선대표단 단장인 외교통상부 차관보 리수혁은 6. 15 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다, 동포애적,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조선에 대한 경제적지원을 계속해 나갈것이다, 핵문제는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동시행동순서>를 내놓았다.

일본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국장 야부나카 미토지는 핵문제와 함께 미싸일, 립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6자회담에서 한 각 대표단들의 기초발언들을 통하여 각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볼수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보장이 우리의 목표라는 시종일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동시행동원칙 등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뚜렷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 대 우리의 핵계획포기를 목표로 세우고 그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해 나갈것을 요구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까지 제시하였다.

중국과 로씨야, 남조선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면서 일괄타결과 동시행동 방식을 취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일본은 핵문제의 해결보다도 랑치문제 같은데 초점을 집중하면서 6자회담을 국내의 정치적 리해관계에 맞게 써 먹으려는 태도를 보이였다.

기초발언들의 전반적인 론조들을 보면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미사이의 모든 우려사항들을 일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해 나가야 한다는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러한 견해들을 전면거부하였다.

미국은 실질적인 정책전환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원칙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우리가 핵계획을 먼저 포기해야만 안전담보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론의할수 있으며 우리가 핵계획을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도 쌍무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미싸일, 상용무력, 인권 등 이여의 문제들도 론의해야 한다는 립장이다.

미국은 우리가 이번에 핵계획포기의사를 밝혀야 다음회담이 이어 질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미국은 우리가 깨깨 무장을 해제한 다음에야 움직이겠다는것이다.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상태에서 타방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것으로서 그 진의도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우리를 무장해제한 다음 먹자는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한계를 넘어도 너무 넘는 강도적인 요구이다.

결국 이번 6자회담을 통하여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면서 압력으로 우리의 무장해제를 꾀하고 있다는것이 보다 명백해 졌다.

사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최소한 <미국의 정책전환의사 대 조선의 핵포기 의사>표명정도라도 합의가 이룩되여 모처럼 마련된 대화과정이 계속 이어 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마저 사라진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것인가 하는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미국은 말 대 말로 정책의지를 밝히는것마저 완전 거부함으로써 다음회담의 전망자체를 위협에 빠뜨리였다. (끝)

**<외무성대변인 담화> 미국이 제할 바를 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소원을 풀어줄 용의가 있다  
(2004. 3.10)**

(평양 3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부쉬 행정부는 지난 2월말 베이징에서 있던 6자회담과 관련하여 마치 그 어떤 《공정적결과》라도 있는 듯이 자화자찬하며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여론을 각방으로 내돌리고 있다.

베이징 6자회담이 미국의 구태의연한 《선택포기》 주장으로 하여 아무런 실질적결과물도 없이 무색하게 끝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6자회담결과를 《성과》로 미화 분식하고 있는 것은 핵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저들의 처사를 두고 내외에서 빗발치는 비난을 막으며 올해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보려는데 그 속심이 있다.

지금 미행정부 관리들은 우리의 《검증가능하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 폐기》와 《우라늄 농축계획》의 공개 및 폐기 등 지난 회담에서 배격 받은 묵은 보따리를 그대로 들고 다니며 우리에게 《선택포기》 주장을 내리 먹여보려고 헛되게 시도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가 부득이 핵 억제력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기인된다.

우리는 이제라도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면 핵무기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자는 립장이 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6자회담에서 조미사이에 아직 신뢰가 없고 단번에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합의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의 첫단계 조치로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 대 우리의 핵무기계획포기》 의사를 공약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우리가 핵무기계획을 동결하는 대신 유관측들이 동시행동방법으로 대응한 보상을 할 데 대한 신축성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의 제안은 지극히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하여 미국을 제외한 모든 회담참가국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조미사이의 근본적인 립장 차이로 하여 그 어떤 결실도 볼수 없었다.

《전제조건 없는 회담》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우던 미국은 정작 회담석상에서 아무런 정책변화의지도 보이지 않고 지난해에 있던 3자회담과 6자회담 때 들고 나왔던 《선택포기》 주장을 그대로 되뇌이는데 그치었다.

미국 측은 애당초 협상하려는 자세가 아니었다.

미국 측은 행정부로부터 그 어떤 협상권한도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우리의 제안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하였는가 하면 조미쌍무접촉에 나와서 조차 대화는 있지만 협상은 없다고 공공연히 발언하는 등 무성의한 협상자세로 일관하였다.

미국 측은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와 언동은 미국이 우리와 공존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지난시기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논의 해결하자니, 6자 틀거리 안에서 쌍무회담도 하자니 한 것들이 다 정책전환이 없는 한갓 요술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미국의 독선적이며 일방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6자회담은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장소가 아니라 시간보내기장소로 되었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우리는 문제해결의 직접적당사자인 미국이 회담에 립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조건에서 미국이 다른 소리를 할 준비가 될 때에 가서 다음번 회담을 가지자고 제의하였다.

회담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죄인들에게나 강요할 수 있는 《검증가능하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폐기》를 입버릇처럼 외워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듣기에도 민망스럽고 역스럽기 그지없다.

조선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절차와 방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미국이 《검증가능하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폐기》라는 표현을 그렇게도 쓰고 싶다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완전한 대조선적대시정 책포기》를 공약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제할 바를 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소원을 풀어줄 용의가 있다.

미국이 배격받은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폐기》를 계속 고집하는 데는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에 속하는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까지 말끔히 없애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핵문제의 종착점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하여 평화적 핵활동까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제적으로도 비핵지대에서의 평화적 핵활동은 합법화되고있다.

이번 6자회담에서 다른 대표단들은 우리가 핵무기계획만을 포기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검증가능하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 폐기》에 관한 저들의 일방적주장이 그 누구의 지지라도 받은 것처럼 광고하면서 못사람들을 웃기고 있다.

우리는 이번 회담결과와 관련하여 《우라늄농축계획》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이 무근거하게 걸고든 《우라늄농축계획》에 대해 《인정》한적이 없다.

우리는 회담에서 미국 측에 《우라늄농축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했으며 지어 미국 측이 그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 해명해줄 것이라는 아량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궤이하게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증거는 내놓을 수 없다고 맥빠진 소리를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더러 《우라늄농축계획》을 내놓으라고 우김으로써 회담 참가자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미국이 《우라늄농축계획》을 가지고 것처럼 생억지를 쓰는 것은 그를 구실로 우리를 이라크처럼 어찌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분별한 립장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줄 뿐이다.미국의 태도는 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면서 탄장을 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거듭 경고한바와 같이 시간을 끄는 것은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 그동안 우리는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더 빨리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든 때를 놓치면 랑패를 보기 마련이다. 미국이 우리의 립장을 외면하면서 조선이 이라크처럼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망상은 없을 것이다.

주체93(2004)년 3월 10일 평양(끝)

<조선외무성대변인>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에서 《동결 대 보상》안을 토의할 것을 주장 (2004. 4. 29)

(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29 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제2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라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가 5월 12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회의의제에 여론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으며 벌써부터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돌고 있다.

이번 실무그룹 회의가 자기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하자면 의제를 바로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철두철미 《동결 대 보상》안을 토의하기 위해 이 회의에 참가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동결 대 보상》안은 조미사이에 아직 신뢰가 없고 미국이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을 단번에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형편을 고려하여 그 첫단계 조치로서 지난번 6자회담에서 우리가 내놓은 신축성있는 제안이다.

조미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 대 우리의 핵무기계획포기》 의사를 세계 앞에 공약하고 우리가 핵계획을 동결하는 것과 병행하여 미국과 유관측들이 대응한 보상을 하면 핵문제해결에서는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핵폐기》 주장에 집착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것은 회담 앞에 인위적인 장벽만을 쌓는 것으로 될뿐이다.

미국이 전패국도 아닌 우리에게 무엇을 《되돌려 세울 수 있다,없다》 하고 강요하려 든다면 구태여 미국 측과 마주앉을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우리는 오는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에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참가할 것이나 회의성과는 우리 하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미국의 립장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이 부당한 주장을 고집하면서 계속 시간이나 끌려한다면 미국에도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시간은 미국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끝)

## <조선외무성 대변인>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에 언급 (2004. 5.15)

(평양 5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6자회담실무그룹 회의가 끝난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실무그룹 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 조선반도비핵화의 총적목표를 견지하며 그 첫단계 행동 조치로서 핵동결에 들어갈데 대한 의지를 밝히고 어떻게 하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에서 최대한의 신축성을 발휘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동결 대 보상》안은 그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이번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다수의 참가국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전패국도 아닌 우리에게 또다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핵포기》(CVID)에 의한 《선택포기》만을 강박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전에는 그 어떤 론의도 할수 없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토의에 제동을 걸었다.

더우기 미국은 이번에 저들이 꾸며낸 《우라늄농축》과 관련한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또다시 들고나왔다.

이것은 미국이 올해말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무난히 치르기 위해 그때까지는 6자회담에서 핵문제해결과 관련한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허위정보를 날조하여 침략전쟁을 합리화하는데서 명수로서의 기질을 보인 부쉬집단의 파렴치성에 대해서는 세상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회의에서 미국이 내놓은 날조된 자료가 때가 되면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는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그것을 단호히 일축해버렸다.

이번 회의에서 표출된 미국 측의 타당성없는 립장은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였다.

지금 세계여론들은 미국이 《선택포기》만을 고집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진지성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담에서 그 어떤 전진도 이룩할 수 없었다고 평하면서 공리공담이나 하는 6자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혹을 던지고있다.

우리는 6자회담과정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인내성을 발휘하여 대화에 립하자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평화회담》의 간판 밑에 우리의 《제도변경》과 《무장해제》를 추구하고면서 끝까지 시간을 끌려 한다면 우리도 그 공간을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계속 리용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미국의 무의미한 시간끌기전술은 우리에게도 별로 나쁠것이 없다.  
(끝)